

확 늘어난 광주 1인 가구...맞춤형 지원 '솔로 투게더' 눈길

시, 공공·민간 데이터 분석 1인가구 실태보고

1인 가구 64%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월평균 95만원 지출...월 31명 이상과 소통

광주지역 1인 가구의 63.8%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약 95만원, 월 31명 이상과 통화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지역 1인 가구의 경제여건과 소비 현황, 생활패턴 등을 심층 분석한 '광

주광역시 1인가구 실태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의 공공데이터와 SK텔레콤, 신한카드, 코아크레딧뷰로(KCB), SK브로드밴드 등 민간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개인 식별없이 분석한 결과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5년 3월 기준 광주 거

주 1인 가구(5만295명)와 타지역으로 진출한 1인 가구(1만2086명)의 데이터를 비교해 이중(輿)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경제여건 분석 결과, 광주 1인 가구의 63.8%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분포했다. 대졸이 없는 가구는 63.4%였으며, 대졸 및 기타 연체자 비율은 1.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체자 중 33.0%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현황에서는 1인당 월평균 카드 지출액은 약 95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소매(26.6%), 종합 소매(12.2%), 음식점업(11.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생활 패턴으로는 1인 가구의 86.8%가 월 31명 이상과 통화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IPTV 등을 시청하는 비율은 30.8%였다. 다만 소득이 낮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IPTV 시청 시간은 길어지고 평일 외출 빈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광주 거주 1인 가구와 타지역 진출 가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도 눈에 띄었다.

타지역 진출 가구는 광주 거주 가구보다 고소득 비율(연 소득 4000만원 초과)과 카드 소비액(평균 105만 원)이 높았으나, 통화 대상이 없거나 외출 빈도가 낮은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 구조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24년 광주 전체 인구는 2.9%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9만3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19.7%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북구 인동이 재개발 영향으로 전체 인구와 1인가구가 모두 증가했다. 광산구 하남동은 1인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북구 용봉동이 가장 많았으며, 비율은 동구 서남동이 가장 높았다.

광주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연령대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의 '잇:은(ON) 컬처·키친', 서구의 '세

상 밖으로 1.5보, 서로를 잇는 1.5가구', 남구 '1인가구 성장·연결·동행 날아올라', 북구는 '중장년 1인가구 싱글업!', 광산구는 '마음·관계·생활·희복 패키지'와 '아재들의 취향있다' 등 자치구별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박해미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번 분석은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패턴과 소비행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출된 지표들을 향후 광주시 1인 가구 정책 추진 및 1인 가구 맞춤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국기유산야행' 밤에 만나는 광주 '시간 위를 걷다'를 주제로 지난 2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중광장과 광주읍성, 서석초 일원에서 열린 '2026 광주국기유산야행'을 찾은 시민들이 광주읍성기둥길을 표현한 '빛달'을 걷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정수 확대·선거구 변동

비아동 광역·기초 선거구 달라...유권자 혼란 우려

광주시의회가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자치구의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와 일부 선거구 조정이 핵심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

수는 기존 69명(비례 9명·지역구 60명)에서 73명(비례 10명·지역구 63명)으로 4명 늘었다.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인 광산구 라 선거구에 1명이 추가로 반영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3명에서 14명, 남구 11명에서 12명, 북구 20명에서 21명, 광산구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씩 증가했다.

비례대표는 북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지역구는 서구 다선거구(2명→3명), 남구 나선거구(3명→4명), 광산구 나선거구(3명→4명) 등 일부 선거구에서

정수가 확대됐다. 선거구 명칭도 광역의원 선거구 변경에 맞춰 일부 조정돼 북구 라·마·바 선거구 명칭이 순환 변경됐다.

다만 광산을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들 사이 두 차례 수정이 이뤄진 끝에 결국 2022년 기준으로 회귀했다.

비아동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첨단1·2동·하남·임곡·수원동과 함께 묶였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신가·신장동과 같은 선거구로 정해져, 동일 지역 유권자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서로 다른 선거구 편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같은 불일치는 공직선거법 부칙 규정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기존 선거구 틀을 유지한 채 '정수만 증원'하도

록 제한된 반면,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대 선거구 도입에 맞춰 행정동 단위 재편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산구 4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귀곤 광주시의원은 "비아동이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정치적 셋방살이'를 겪고 있다"며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서로 다른 기형적 구조는 주민 혼란을 가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美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성에 트럼프 대피

체포된 용의자는 30대 남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이 들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 J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뒤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용의자가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30대 남성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후속 국가 연주 의식이 끝나고 모두 식사하고 있던 오후 8시

30분께 사건이 발생했다.

행사 도중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고, 곧바로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총격 발생"이라고 외쳤다고 백악관 폴 기자단이 전했다.

무대 위에 마련된 헤드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 J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뒤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용의자가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30대 남성이라고 전했다.

연습뉴스

시, 벼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 지원

친환경벼 ha당 120만원 정액 지급...내달 1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쌀값 불안정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202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 중소농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우선 복합했던 면적 구간을 1ha 이하, 1ha 초과~3ha 이하, 3ha 초과~5ha 이하 등 3개 구간으로 단순화했으며, 지원 상한을 5ha로 설정했다.

이는 일부 대규모 농가에 편중됐던 지

원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농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벼 재배농가에는 1ha당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일반 벼 재배농가에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 벼 지원 단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5년산 벼를 1000㎡ 이상 직접 재배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3@gwangnam.co.kr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전력거래소 제10대 이사장 내정

내달 취임...3년 임기 시작 실물산업경제 전문가 평가

전력거래소 제10대 이사장으로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사진)이 내정됐다.

김성진 원장은 이르면 내달 초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정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이사장 공모에 참여한 인사 가운데 김 원장을 전력거래소 제10대 이사장으로 낙점, 임명절차를 준비하도록 최근 통보했다. 김 원장은 내달 4일 전력거래소에 부임해 공무를 시작한다.

고졸 출신인 김성진 이사장 내정자(63)는 광주 대동고,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리즈대에서 중국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 333호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중국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



정수석이 석연찮은 이유로 자신에게 중국 산업스파이 혐의를 씌워 부임 4개월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게 그가 밝힌 사임 배경이다. 이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제산업특별보좌대신캠프 일자리위원회 위원,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후보 정책조직에 참여했다. 정치에도 뜻을 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광주 광산을 경선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베이징 사회과학원에서 2년 반 가량 연구에 매진한 경험이 있는 중국통이자 산업부에서 27년을 근무한 실물산업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점·경제정책관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국립대 3곳 선정해 AI 분야 인재양성

김민석 총리 "지방수도성장 핵심은 인재"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지방수도 성장과 관련해 "핵심은 인재"라며 "산업·일자리·주거 등 국토 공간 대전환의 핵심 과제들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가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 장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프라 구축 및 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구축의 큰 그림이 잘 그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하반기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 5급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지원에도 관계부처의 정책·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집중지원 대상 거점 국립대 3곳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과정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할 수 있

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관련) 논의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연구하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기존 17개 지방정부 중심 체계를 생활권, 산업·경제권 단위(5급3특)로 확대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와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가 꾸려진다.

최고급 교육부 장관은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초광역 협으로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오 기자 solee235@